

GGWF REPORT .

무상급식 및 아동복지 현안과 정책방안

연구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267-9371 E-mail : voiced@ggwf.or.kr

□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 전국 16개 시·도, 229개 시·군·구 중 81.2%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는 2011년 9월 현재 도내 94%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체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
- 그러나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2004년 이후 6000억원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4,522억원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는 재정운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반면, 친환경급식은 2011년 8월 현재 농가당 4천 800만원의 소득을 확보하였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동과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때문에 학부모의 98.2%는 친환경 급식에 찬성하고 있으며 50.4%는 급식비를 올려서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희망함.
- 따라서 경기도는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친환경 급식의 확대로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함. 그와 동시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아동양육정책

-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정부는 2013년 까지 양육수당을 현행 차상위 계층 이하 1세 미만 아동에서 소득하위 80% 이하 5세아 까지 확대하고 수당액도 늘릴 계획임. 그러나 아동 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대 5세까지이며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므로 포괄적인 현금지원 정책이 필요함.

- 연령기준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부터 궁극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까지 대상으로 첫째 월10만원, 둘째 월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지급.

● 아동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혜택에 관심을 가져야 함.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것은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아동보호정책

● 아동안전(Child Safety)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동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임. 특히 아동안전 관련 정책은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함.
- 경기도의 ‘꿈나무안심학교’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하여 맞벌이부부와 한 부모가정,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자녀를 하교시간 이후에 돌봐주는 제도로서 아동들의 방과 후 안전을 보장하며 특기와 적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까지 도내 꿈나무안심학교를 약 300개로 확충 필요.
- 아동(보건복지부, 18세 미만)과 청소년(여성가족부, 9세부터 24세까지)으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하여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아동청소년 과를 담당부서로 일원화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및 특성에 맞는 학대 및 폭력 예방교육을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실시해야 함.

목 차

I. 무상급식 쟁점과 현황 / 1

II. 아동복지 분야 현안 및 정책방안 / 9

1.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9
2. 아동안전(Child Safety) • 15
3.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활성화 • 21
4. 아동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Child Mental health program) • 24
5. 가족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
(Healthy Family, Healthy Community-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 • 28

III. 정책제언 / 31

I

무상급식 쟁점과 현황

▣ 학교 무상급식

- 무상급식(無償給食)은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함.
-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함.
- 경기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후보자가 2010년 6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0년 7월 취임식에서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후 서울시 의회 등이 이에 동조하여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음.

〈표 I-1〉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¹⁾

	무상급식 확대 찬성	무상급식 확대 반대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31조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수업료면제, 책·준비물 등 무료로 준비하듯이 학교급식도 무료여야 함. - 학교는 edu + care ⇒ educare 학생들을 사회에서 책임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다른 수익자 부담경비도 많이 있음.
인권·교육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수혜 사실은 학생들에게 자의로, 타의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하기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을 본인이나 타인이 모르도록 할 수 있음.
사회통합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로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통합에 합리적. (예 :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 - 노인층지하철 티켓제공, 출산보호 장려금 등) 무상급식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에 대한 감성, 자립성이 길러지기 어려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급식으로 인한 많은 지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은 제로섬. - 교육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음. - 무상급식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는 실정임.
급식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은 각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및 직접유통 시스템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질 좋은 급식 제공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개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무상급식의 확대(2011. 6. 13), 네이버블로그 원탁토론 발췌.

2 무상급식 및 아동복지 현안과 정책방안

〈표 I -2〉 전국 29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²⁾

시도 별 (시군구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대구(8)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10)	0	1	1	10	6	4	10	10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울산(5)	0	0	0	0	1	0	1	20	0	0	0	0
경기(31)	0	0	0	0	6	25	31	100	2	0	2	6.5
강원(18)	0	1	1	5.6	1	2	3	16.7	0	1	1	5.6
충북(12)	0	9	9	75.0	0	12	12	100	0	12	12	10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17	5	22	100	19	3	22	100
경북(23)	23	0	23	100	4	3	7	30.4	4	1	5	21.7
경남(18)	18	0	18	100	8	10	18	100	8	10	18	100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합계(229)	93	12	105	45.9	89	97	186	81.2	40	36	76	33.2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급식네트워크)가 8월 2일 내놓은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

2) 2011. 7. 10 현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분석결과. 오마이뉴스.

우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 현황

-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논쟁이 전개 됨.
-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확대대상에 따라 2014년까지 초,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예정, 이에 따르는 비용이 6,61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

〈표 I -3〉 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2010. 2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 중학교	초, 중학교	
확대대상	농어촌전체 도시 5~6년(하반기)	농어촌전체 도시 3~6	초등전체	초등전체 중3	초, 중 전체	
인원수	386,984	660,000	872,000	1,048,000	1,389,000	
소요액	교특	91,165	128,486	206,802	258,060	340,994
	지자체	54,903	126,256	183,254	234,943	320,290
	계	146,068	254,742	390,056	493,003	66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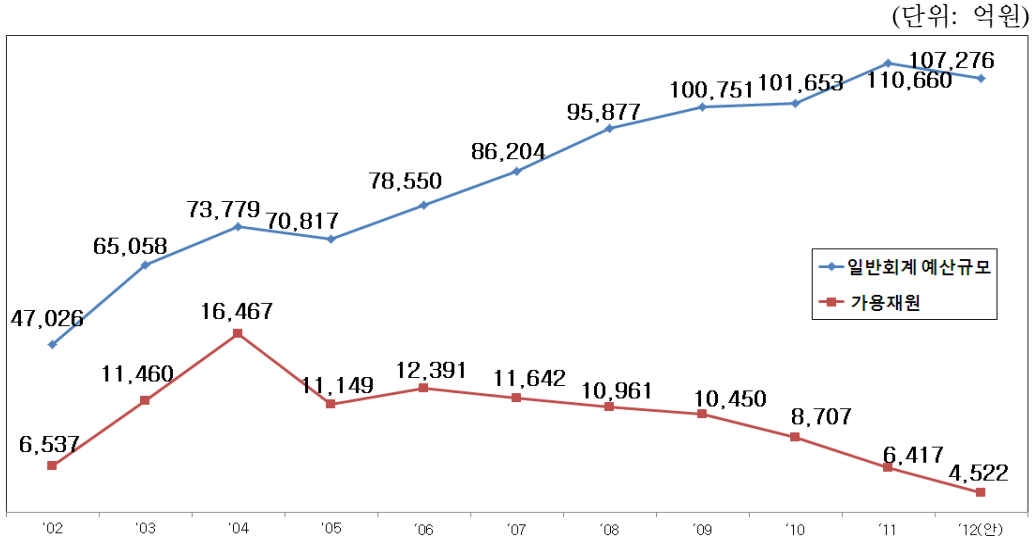
※ 2011년 계획 변경(2010. 10.15) : 초등 농어촌 전체, 도시 3 ~ 6학년 → 초등전체

4 무상급식 및 아동복지 현안과 정책방안

- 2011년 9월 현재 도내 94%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안에는 교육청 예산에서 53%, 시·군 47% 부담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2012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중학교 2학년 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생 3,000억원, 중학생 2,000억원 총 5,000억원³⁾
 - 경기도 교육청과 시·군, 경기도가 어떻게 Matching 하게 될지는 논의 필요
- 그러나 2014년까지의 경기도 전체 초, 중학생 무상급식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어 계획적 재정운용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⁴⁾(1,942억원)은 전년도 대비 137.7% 증가(전체 9.1% 증가)하였음.
 - 교육격차 해소(8.4% 감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9.9% 감소)의 예산 감소
 - 무상급식에의 예산 집중으로 교육격차 및 여건은 열악해질 전망
-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 6000억원에서 8년째 감소하여 2012년 4,522억원 전망(전년 대비 29.5% 감소)임.

3)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담당자, 2011. 9월

4)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은 3,307억원으로 교육청 1942억원, 시군 1365억원 매칭 펀드로 조성



[그림 1]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및 가용재원 변화 추이

- 교육청의 요구대로 무상급식비 재원 30%(1500억원)를 경기도가 분담한다면 가용재원의 1/3이 사라짐.
-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교육 격차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의 우선적 투입이 필요함.

▣ 정책방안 - 무상급식보다는 친환경급식

- 친환경급식예산으로 2011년 629개교('10 246개교)가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도내 초등학교 560개(54%), 중학교 69개(12.4%)가 친환경급식
- 2012년 경기도 친환경급식 예산 610억 책정.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친환경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2014년까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로 친환경급

식 확대 계획에 있음.

〈표 I-4〉 경기도 친환경급식 현황 및 계획(2011.9~2014)

구 분	2011년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 중학교	초, 중, 고 전체
확대대상	초등학생 54%	초등전체	초등전체 중학교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소요예산 금액	농산물 240억원 축산물 160억원	610억원	790억원	1,110억원

※ 자료: 경기도 농정국 친환경농업팀

▣ 친환경 급식의 성과

- 친환경 급식의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확보하여 참여 농가당 4천 800만원의 소득 확보하였음.
-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식재료 불안 해소할 수 있음.
 - 축산물은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직접 각급학교로 공급
 - 경기도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얼굴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안전한 급식재료로 사용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아이들과 부모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
 -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보장
- 학부모들도 친환경급식 선호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98.2%의 학부모가 학생들의 건강, 급식의 질 향상, 품질과 안정성 등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확대를 찬성

- 50.4%의 학부모는 급식비 단가를 올려서라도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희망
- 학교영양사와 영양교사 중 87.8%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경기도는 학교밖⁵⁾ 급식 책임

- 경기도는 학생급식을 위해 28,360백만원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층 급식 5,346백만원, 결식아동 급식 16,964백만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6,050백만원 등
- 급식비용이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임.
 -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 시 2014년 1,100억이면 가능 ※ 시·군비도 30% 동일 부담

〈표 I-5〉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 규모(2012~2014)

구 분	2012년 초등전체	2013년 초등+중3	2014년 초등+중등 전체
월가구소득 2,044천원 ^{*)} (최저생계비 150%)	636억원	798억원	1,113억원
월가구소득 1,772천원 ^{*)} (최저생계비 130%)	238억원	351억원	578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49억원	70억원	112억원

^{*)} 2010년 기준

5) 학교급식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 지원

8 무상급식 및 아동복지 현안과 정책방안

II

아동복지 분야 현안 및 정책방안

■ 아동복지 현안

- 무상급식과 같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 이외에도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최근의 현안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정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경기도의 아동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1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아동수당의 목적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단지 출산율 상승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실현은 물론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

재분배,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과 부합 함.

▣ 양육지원 수당제도의 현황과 한계⁶⁾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지원 제도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입양자녀양육수당·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수당, 한부모 자녀 양육수당 등으로 대표됨.
- 정부는 양육수당의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싣고, 그 대상을 현행 차상위계층 이하 1세 미만에서 소득하위 80% 이하 5세아 까지 확대하고 수당액도 늘릴 계획임 <표 II-1> 참고.

<표 II-1> 양육수당 확대 계획(2010~2013년)⁷⁾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대상	0~1세 차상위계층 이하	0~3세 소득하위 70% 이하	0~5세 소득하위 80% 이하	0~5세 소득하위 80% 이하
소요예산	657억원	5,452억원	6,511억원	5,815억원
지원단가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23만원	월 23만원

- 양육수당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수당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음.

6) 국회입법조사처, 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참고.

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9.

〈표 II-2〉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수당제도⁸⁾

제도명	근거법률	대상	급여액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연령 : 18세 미만 · 소득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재가장애아동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경증장애인 : 월 2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 취약계층 농림어업 및 임업인 · 만 0세~만5세 (만6세 취약유예 경우)	· 시설 미이용아동 : 법정저소득지원 단가의 35%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만 12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한 부모가정	· 월 5만원
입양자녀 양육수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아동을 입양한 한부모가정 · 입양아동 만 13세까지	· 월 10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아를 입양한 양부모 · 입양장애아동 만18세까지	· 경증 : 월 551천원 · 중증 : 월 570천원

- 그러나 양육수당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행 만 1세 미만 아동에서 대상연령을 점차 확대한다 해도 최대 가능 연령은 보육 시설 이용연령이 만 5세임.
- 이외의 수당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며, 일부 수당제도는 소득기준이 적용됨.
-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현금지원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함.⁹⁾

8) 자료: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수당의 유형

- 보편적 수당제도의 특징 :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
 - 보편적 아동수당은 일정연령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부모의 소득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급여 제공함.
 -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은 주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 또는 최소 노동연령인 만 16, 17세 혹은 만 18세 임.
 - 급여체계는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되는 경향이 있음.
 - 지급대상은 주로 어머니이며, 과세하지 않음.
- 소득연계형 수당제도의 특징 :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 일정소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급여를 제공함.
 - 대상아동의 연령은 학령기 아동을 포함하여 만 18세임.
 -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미약함.
 - 지급대상은 세대주 등 다양함.
- 프랑스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모두 출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함.

▣ 정책방안

- 아동수당제도의 적용대상
 - 연령기준은 제도 도입 시에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까지 단

9) 현금지원은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는 성격이 다름.

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출생순위는 출산을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둘째 자녀 이상에게는 급여액을 증액(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월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 하는 것이 필요함.
- 소득기준은 제도 도입 시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상 가구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함.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 외국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주로 어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동수당이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연관되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제도 도입 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급대상을 어머니로 하고 궁극적으로 양쪽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함.

● 아동수당제도의 지급액

- 아동수당 급여액은 월 10만원으로 함.
- 출산장려 효과를 위하여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월 수당액이 증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¹⁰⁾, 둘째 자녀는 월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20만원이 적합함.

10) 장애아동수당, 입양자녀 양육수당의 최소금액이 10만원.

● 재원 및 소요예산

- 아동수당제도의 재원은 주로 일반세입에서 총 비용을 부담하며, 수급 자격을 고용상태와 연계할 경우는 수당비용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함.
- 따라서 제도 도입시 아동수당제도의 재원은 일반세입에서 총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
- 소요예산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3조 6천억원이 소요되고,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 약 11조원이 소요됨.

● 아동수당제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시 비교적 적은 재원이 소요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수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때에는 1)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2) 지급액, 3)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 4) 지급대상가구의 소득수준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적 재정 지출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아동수당제도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동안전(Child Safety)

▣ 아동안전 정책의 필요성

-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위험증상 발생의 비율이 높고, 인격과 정서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
- 그동안 아동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책임지고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아동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특히 아동안전관련 정책은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함.

▣ 중앙정부의 아동안전 대책마련 의지

-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부처·청이 범정부차원의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대통령비서실에 ‘어린이안전점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2003년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11개 법률을 개정하였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년 1월): 학교폭력 문제 효과적 대처 전담기구 설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년 5월):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이후의 사회적응 지원.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년 1월):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007년 1월): 어린이놀이 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 하였음.

▣ 경기도의 정책현황

- 경기도: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종합대책
 - 경기도가 2008년 5월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은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및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아동범죄 ‘예방교육’의 강화,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제공,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아동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 강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구축 등.
- 경기지방경찰청: 아동안전 우수학교 인증제
 - 경기지방경찰청은 2010년 7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

도를 평가 하여 개선하는 ‘아동안전 우수학교 인증제’를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

- 경기도내 1,144개 모든 초등학교 안팎의 인적·물적 안전요소를 평가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 경기도는 2010년 6월 방과후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0년 8개인 꿈나무안심학교를 2014년까지 300개로 확충해야 함.
- 꿈나무안심학교는 초등학교·대학교·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자녀를 하교 시간 이후에도 돌봐 주는 학교로서, 아이들이 방과후 안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정책방안

●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

- 아동학대의 특성상 학대피해 아동에게는 다양하고 폭넓게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아동이 속한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체계와의 협력이 필요함.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인근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시·군의 종합사회

복지관 등 지역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설치**

-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총 지역은 총 11개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시흥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 경기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대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학교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함.
-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 있음.
-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경기도 보호체계(Gyeonggi-do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를 구축**

● **경기도와 모든 시·군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일원화**

- 경기도와 모든 시·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

나, 많은 시·군에서 아동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아동관련 팀에서 청소년업무는 교육지원과의 청소년관련 팀에서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음.

- 아동(보건복지부, 18세 미만)과 청소년(여성가족부, 9세부터 24세까지)으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하여,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하나의 과(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권고 함.
- 아울러 아동은 12세 미만,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로 통일하여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학대와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조기 개입 가능성을 높여야 함. 또한 아동이 자신의 문제와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과 이용률 향상이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및 특성에 맞는 학대 및 폭력 예방교육을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사업에 적극 참여

-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사회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드림스타트사업은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와 유사하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민간에서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함께 We Start 사업을 확대하였음.
-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신속히 초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의 아동들을 스크리닝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아동인구수 대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매우 적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정책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함.

3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방과 후 프로그램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짐. 그리고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개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각됨.
- 그러나 방과 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참여대상 학교 및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사교육비의 경감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사교육대비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결여가 있기 때문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능 위주의 교육,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강사의 자격요건에 따른 전문성 문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교육과정 부재의 문제 등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결여 시키고 있음.
-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중 교과강좌의 경우는 현직교사가 외부 강사 보다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특기적성 강좌의 경우는 현직교사 보다 외부 강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외부강사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 자격요건이 필요함.

〈표 II-3〉 강사 유형별 특기적성 강좌현황(2008년도)¹¹⁾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특기적성 강좌	27,640(32.6)	57,169(67.4)	84,809(100)
교과 강좌	93,829(92.3)	7,810(7.7)	101,639(100)
전체	121,469	64,979	186,448

- 방과 후 외부강사는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의 기준이 아님. 특히 지방의 경우 기준 없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므로 전담 및 전문인력 보다는 비전문적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기적성 강좌에 대한 전문강사 확보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안

-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활성화를 위해 현황 및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외부강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교실의 설

11) 교육과학기술부(2009). 방과 후 학교사업 관련 국회제출자료.

치가 필요함.

- 교사 외에 학원강사, 대학교수, 대학생(전공자) 등 다양한 외부 인력의 참여를 권장함.
- 방과 후 강사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다양한 방식의 연수를 실시. 특히 교사와 외부강사간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계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일률적인 강사비 책정이 아닌 여건 및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이 가능하도록 권장(전문강사들이 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프로그램 수강 학생 수에 따른 강사비 책정 필요), 평가가 좋은 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 외부강사에게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들의 이직률(35%)처럼 한국의 외부강사 또한 이직률이 높아지게 될 것임. 또한 외부강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아동에게는 상당히 위대한 요소가 되므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꼭 필요함.
- 또한 도심지역외에 농촌의 경우는 교통시간, 교통비 등을 감안하여 강사비 책정 및 인센티브 지원필요.
-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 강사풀을 구축, 관리를 지원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전문가 등 우수 인적자원이 새롭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

내 및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강사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원강화 사업 및 방과 후 프로그램관련 전용교실 설치구축 사업추구.
 -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방과 후 전용교실 설치를 기피하는데, 이는 인건비 충당과 시설 설치비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임.
 - 아동의 방과 후 학습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감 저하로 인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따름.
 - 그리고 중산층 가정의 아동은 방과 후 프로그램 보다는 사교육을 이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방과 후 활동은 대부분 저소득층 빈곤 가정의 아동만 이용하게 되어 이용 아동은 빈곤의 낙인을 받게 될 우려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방과 후 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4 아동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Child Mental health program)

▣ 아동기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필요성

- 예방적 프로그램의 중요성
 - 정신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임.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아

동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업’ 안내에서의 아동정신건강 사업의 주된 초점이 ADHD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고위험 군 아동 선별과 치료로 치료 중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
- 아동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고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므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아동정신건강 주요 현황¹²⁾

- 2010년도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13.7%, 중학생이 12.2%, 고등학생이 10.0%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저소득층(100만원 미만 가구아동의 경우 11.0%, 1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가구의 경우 11.1%)과 한 부모 가구 아동(한부모 가구 아동의 경우 7.3%, 양부모 가구 아동의 경우 3.0%)에게서 높은 비율의 인터넷 중독율이 보고되었음.
- 2010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15세-24세 청소년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였음. 지난 1년 동안 자살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8.9%로 보고되었음. 15세-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68.8%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문제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음. 아동기 정신건강

12) 통계청, 2010. 『2010년 청소년통계』 참고.

문제 현황은 청소년기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책방안

- 아동 정신건강권, 아동 권리, 보편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 아동기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로부터 최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임. 미래의 사회의 중추역할을 하게 될 인재양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OECD 자료(2008)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는 실업이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질병의 위험 증가, 사회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사회가 높은 자살률을 경험하면서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에서도 자살위험이나 우울문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는 현실임. 자살이나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상태로, 아동기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아야 할 것임.
 - 보편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아동권리 확보이자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는 방안이 됨.
- 학령기 초반에 조기개입 프로그램 실행과 적응 유연성 강화
 - 아동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학령기 초기에 도입되어야 함.

-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어려운 일에 대응하는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아 형성과 정신건강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임.
- 학교 기반 자존감 향상(self-esteem enhancement) 프로그램 도입
 -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함. 자아 개념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 받음. 아동기 삶의 주요 환경인 학교는 자아개념 형성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됨.
-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서구에서는 앞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꾸준히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국의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정신건강, 자존감에 대한 이해는 서구와 차별됨.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서구와 달리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함.
 - 또한 다문화 시대, 가족구조의 변화, 불안정한 경기와 정신건강문제의 확산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5 가족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 (Healthy Family, Healthy Community-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

▣ 가족과 지역사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

- 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되므로 아동의 건강증진은 가족 단위에서 조명되어야 함.
- 토요일무제와 학교의 토요일업일 시행으로 학령기 아동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확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을 단위로 한 혜택은 부족한 실정임. 더불어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호혜성을 갖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가족원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 정책방안

- 22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교환 운동으로서 Time Banks¹³⁾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학습도우미, 차량봉사, 장애인동행봉사 등을 수행하면 가족의 time bank 구좌에 필요시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13) TimeBanks. 2011. www.timebanks.org

시간이 적립됨.

- 가족구조 운영 :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강조되고 있는 정책을 확장하여 가족을 단위로 자원봉사를 인정하는 방안임.
- 지역사회 자원 이용권 : 지역사회 자원을 사회자원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사회자원 범위를 건강증진 서비스(예: 체력단련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시설 이용권)
- 지역사회 사회교환 화폐 운영 : 사회교환 활동 수행이 가능한 기관(우선적으로 자원봉사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타임 부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지역사회 자원을 사회자원화하는 과정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사회자원 교환은 지역구성원 간의 연계 및 존중, 이타적 자질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참여자 호혜성 효과

-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이 봉사자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제공 개념이라면 타임뱅크 제도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음.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며 무료로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사회 자원교환 효과

-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계 및 개발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편중이나 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지역사회 강화 효과

- 사회문제 예방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타임뱅크에서 표방하는 미션은 ‘좋아지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타임 적립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지역사회가 좋아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III

정책제언

▣ 첫째,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 경기도를 비롯한 전체 초, 중학생 무상급식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 무상급식의 보편적 접근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으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확대보다는 친환경 급식의 확대로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함. 그와 동시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부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외 가정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호자가 급식비를 차등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예를 들어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부모 : 40%, 국가/지자체 : 60%), 중(부모 : 35%, 국가/지자체 : 65%), 하(부모 : 30%, 국가/지자체 : 70%)로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

여 차등 분담하도록 할 수 있음.

▣ 둘째, 아동양육정책

● 아동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는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므로 저 출산 극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출산율 제고의 측면 뿐 아니라 현실적인 아동복지 실현과 가구간의 소득재분배, 여성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에 부합함.
 - 연령기준을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서 시작하여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둘째자녀 이상에게는 급여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함.
 - 아동수당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에는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지급액,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 지급대상가구의 소득수준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정신건강은 예방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나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아동기에 대한 관심은 치료가 주를 이룸.
 - 아동기의 정신건강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와

함께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이 목표가 되는 정책시행이 필요함.

- 또한 아동기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로부터 최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함. 그리고 보편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아동권리의 확보이자 사회의 부담 예방을 가능하게 함.

● 가족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Healthy Family, Healthy Community-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

- 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되므로 아동의 건강증진은 가족 단위에서 조명되어야 함.
- 학령기 아동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고 있음.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가족을 단위로 하는 혜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 셋째, 아동보호 정책

● 아동안전

- 성인에 비해 아동안전사고는 사망 및 증상의 비율이 높고,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동안전사

- 고 예방을 위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안 됨.
- OECD 회원국 중 아동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함.
 -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는 지역사회기관 과 연계하여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하 여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경기도와 모든 시·군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를 일원 화하고, 학대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드림 스타트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아동학대를 신속히 발견하고 위협에 노출된 사각지대의 아동을 스크리닝하여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필요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통계(2010), 2010 청소년통계
정명자(2007),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조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 ‘학교(무상)급식 관련 보고’, 2010. 11. 1, 경기도 교육국.
경기도 ‘무상급식의 올바른 이해’ 발표자료, 경기도청.
이덕난(2010),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연구원, 28(1), 185-207.
이덕난 · 이일웅 · 한지호(2010),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시사점, 비교교육 연구, 20(2), 61-73.
이덕난(2010),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83.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83.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1577 4312

Fax. 031 898 5937

www.ggwf.or.kr

GYEONGGI WELFARE
FOUNDATION



9 788997 321018

ISBN 978-89-97321-01-8
ISBN 978-89-966772-3-9